

# 합의·처벌불원 탄원에... '학동 참사' 처벌 수위 낮아질라

현대산업개발 17명 피해자·가족과 모두 합의, 처벌불원 탄원서 받아 재판 지연에 구속된 5명 중 4명 보석 석방... 행정처분도 장기화 우려 화정 아이파크 수사도 비협조적... 재발 방지 위해 제대로 된 처벌해야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인 '광주시 동구 화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적절한 형벌과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현대산업개발측이 사고 참사 피해자·가족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사건 판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양형요소로, 합의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고 감형 요인으로 반영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학동 참사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부실 공사로 인한 재판 진행중

후진국형 참사가 다시 일어났다는 점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가 선처로 이어지는 구조를 충족해 사회질서 유지 등 국가적 차원에서 내리는 형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해자측과 합의, 처벌 수위 낮추나> 10일 법조계와 동구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17명의 피해자 또는 가족들과 모두 합의하고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아들였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측 탄원서는 대부분 감형요소로 작용해 처벌수위를 낮춘다.

현재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정지선) 재판부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제출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광주일보가 지난 2020년 5월 이후 1년 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23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합의'와 '처벌불원' 탄원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12명의 노동자가 숨진 사건으로 28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2명만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집행유예로 형 집행이 미뤄졌다. 이들의 판결문에는 모두 '유가족과 합의'한 점이 감형 요인으로 반영됐다. 현대산업개발 측 재판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 측이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된 부실한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한 책임 등으로 재판에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부실한 안전관리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안전 불감증으로 빚어진 참사에 대한 잘못을 누워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재판·행정처분 장기화, 그날의 참사 잊혀지지 않을까> 담당 재판부의 강행군에도 심리할 게 많다 보니 재판 속도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재판부는 애초 2월 말 1심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로는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법원의 정기인사 및 담당 부장판사 휴직 등으로 재판부 변경까지 이뤄지면서 올 3월 이후로도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관련 피고인들의 1심 재판 구속기간(6개월)도 만료를 앞두고면서 구속돼 재판을 받던 현산 관계자, 감리,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4명이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학동 참사와 관련, 5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도 장기화가 예상된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달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 측의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동구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원청사인 점을 들어

건설산업기본법(82조) 등을 적용해 영업정지(1년 이내), 과징금(도급금액의 30%이하 또는 5억원 이하), 과태료(2000만원 이하) 등을 서울시에 요구한 상태다. 서울시는 그러나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하도급업체의 등록 관청(영등포구청)의 행정 처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지켜보자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는 사고의 책임이 있는 건설사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우식 참여자 21 사무국장은 "유가족의 합의를 책임을 면할 용도로 쓰려는 현대산업개발측 태도는 어비합의 극치"라며 "잘못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전제되는 합의가 의미가 있다.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합동분향소 설치

오늘 현장 인근 주차장에 마련 '광주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합동분향소가 설치된다. 광주시 서구는 11일부터 아이파크 피해가족협의회와 협의한 데 따라 현장 인근 주차장에 합동분향

소를 마련해 운영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구는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측의 진정성은 사고와 합당한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며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분향소에 피해자 영정 사진이나 위패 등을 놓지 않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교복 나눔장터 오세요 10일 광주시 북구 새마을부녀회 상설교복나눔장에서 학부모들이 교복을 고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화순광업소 등 석탄공사 노조 총파업 결정

일방적 석탄 감산 정책 따른 폐광 반대·노동환경 개선 요구 대한석탄공사 노조가 정부의 석탄 감산 정책에 따른 폐광 반대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10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석탄공사 노조는 이날 화순(동면), 태백 장성, 삼척 도계 등 광업소 3곳과 원주 혁신도시 본사에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전체 노조원 670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669명이 투표에 참여해 96.3%인 645명이 파업 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함께 투표에 부처진 '강원 장성, 도계, 전남 화순 광업소 동시 폐광' 건에 대해서는 조합원 669명이 투표에 참여, 96.4%인 646명이 찬성 측에 표를 던졌다. 노조는 총파업 돌입 시기 등 향후 일정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총파업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률은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 감산 정책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바라는 노동자의 요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진 석탄공사 노조 화순지부장은 "화순 등 전국 3개 광업소 동시 폐광 안전에 대해 조합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 역시 채탄량을 일방적으로

제한해 서서히 탄광 문을 닫게 하려는 정부 방침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석탄이 필요 없다면 3~4년 말미를 주고 우리를 서서히 말려 죽이지 말고 그냥 지금 폐광하자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고 했다. 노조가 스스로 퇴로를 막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정부의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라 석탄공사 채탄량이 100만 수준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현재 작업 속도라면 3년 뒤면 광업소가 모두 폐쇄되지만, 정부와 석탄공사 경영진은 대체 일자리 등 노동자 대책 마련은 소홀히 하면서 일방적으로 감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화순군 등 광업소 소재 지자체들과 정치권도 노동자 실업 문제뿐 아니라 각종 협력업체, 유관기업 쇠락으로 인해 지역사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도 정부와 석탄공사 경영진이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석탄공사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나주시, SRF 열병합발전소 항소심도 패소

운영 거부 책임론 불거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들어선 SRF 열병합발전소가 그동안 문제와 관련, 항소심 법원도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도 '환경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공약적 필요성을 내세워 거부한 나주시 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나주시가 패소한 점을 들어 주민 민원 만을 이유로 발전소 운영을 거부했던 나주시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나주 SRF 발전소를 둘러싼 광주시, 지역난방공사, 나주시 등의 소송이 얽혀있고 지역민 간 갈등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지방정거의 핵심 이슈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고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최인규)는 10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나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난방공사는 지난 2020년 12월 나주시에 사업 개시 신고를 했다가 반려당한 뒤 소송을 냈고 광주지법은 지난해 4월 난방공사 손을 들어주는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 과점에서 법적 제한에 배치되거나 요건에 맞지 않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관련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됐고 폐수원에 너지센터의 정기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점,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환경영향조사에서도 환경상 피해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 법원도 나주시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12월 준공해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연료 반입 문제와 LNG 보일러만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나주 지역민의 민원 등이 제기되면서 여태껏 멈춰선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